

이런

정계개편의 방향성 점검

삐걱대는 정치권, 대안은 시민 세력

정 상 호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그리 길지 않았던 전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집권여당의 당명이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이어 한나라당으로 세차례나 변경된 데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정당구도는 극도의 가변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영남지역의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석권하였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당간의 이합집산은 무엇보다 다음의 이유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난 대선외의 와중에서 각 정당들은 지역적, 이념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의 노선이나 지향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정치인들을 총원하였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정당간의 이념적 스펙트럼상의 차이나보다 정당 내 계파나 인물간의 이념적 스펙트럼상의 거리가 훨씬 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진 재야인사에서부터 극우 보수세력까지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한국식'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현실은 이념적 일체감(ideological identity)과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의 강도를 현격히 떨어뜨리고 있다. '이념의 전시장'인 각 당의 인적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당 내분을 억제해 온 카리스마적 양김의 지도력이 추락하는 순간 정치권의 구조 조정과 빅딜은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정계개편의

카리스마적 양김의 지도력이 추락하는 순간 정치권의 구조조정과 빅딜은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

밀그림은 대략 세 가지이다.

과잉평가된 대통령의 개혁적 의지가 아니라 정권의 성격과 기반에 기초해 볼 때 가장 실현성이 큰 시나리오는 내용과 속도가 제한된 개혁 프로그램 속에서 DJP 공동정부가 그러저럭 운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개혁의 외연과 내포는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사회 민주화의 진전에 턱없이 못미치는 몇몇 경제제도와 정치 절차의 개선에 한

정될 것이다. 이 경우 안정적 정부 운영을 명분으로 한 한나라당 캐트리는 필연적 수순이 될 것이며, 그것의 구체적 양상은 한나라당 자체의 분당보다는 지역연고에 따른 개별의원의 집단적 영입 형태가 될 것이다.

두번째 경로는 개혁의 전면화에 따른 정치권의 근본적 재편이다. 재벌해체와 고용안정을 둘러싸고 노-자관계를 보다 첨예한 사회 갈등으로 부상시키고 있는 최근의 IMF 정국 역시 정계개편을 촉발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벌의 해체, 노동 및 진보세력의 정치권 편입, 남북관계의 급진전 등 개혁 프로그램이 가속화된다면 도처에 긴장이 잠복해 있는 DJP 연합에는 커다란 과열구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가능한 정치세력의 조합은 국민회의-국민신당-한나라당의 민주계를 한편으로 하고 자민련-한나라당의 민정계가 또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현재의 역학관계상 실현성이 낮은 하지만 가능한 세번째 구도는 개혁과 수구, 개혁의 주체와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현재의 정당구도가 진보-자유주의적 보수-수구적

보수의 삼각 구도로 재구조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주의가 완화된다면 이러한 삼각구도는 예상외로 빨리 현실화 될 수가 있다. 비슷한 이념과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 온건야당세력에게 그것은 김대중의 동고동락과 김영삼의 삼도동계가 신민당의 이름으로 결합하였던 79년 이

김대중 정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외국투자가들의 지원이 아니라 국내의 '조직화된' 비판 세력이다

전의 정당체제의 복원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의 제도적 참여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금기의 땅이자 동시에 미개척지였던 진보의 영역에 새로운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험난한 일이다. 이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결국,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놓고 맞교환(trade-off)의 딜레마에 빠진 노동계가 얼마나 빨리 정치의 한축으로 안착하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김대중 정권이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은 그동안 정치참여와 경제적 분배로부터 소외되었던 노동권과 시민단체를 정치적으로 통합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개편이다. 물론 이 말은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저명한 몇몇 인사를 개별적으로 영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사회내에서 이들의 주장과 요구가 조직화되고, 이들의 정치 사회로의 진입을 가로막아왔던 각종 법적·제도적 장벽들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정부를 자임하고 나선 김대중 정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조지 소로스나 마이클 잭슨같은 외국 투자가의 지원이 아니라 국내의 '조직화된' 비판적 지지세력이다. 전임 정권이 여실히 보여주었듯이 이들의 적극적 지지와 동의를 조직화하지 못한다면 개혁은 대통령과 소수 권력 핵심의 은밀한 정치공작 차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의 보수적 경쟁에 시간과 정력을 쏟기보다는 시민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아왔던 국가보안법이나 정치관계법 등의 억압과 제약조건들을 과감히 허무는 것에서 정권의 진로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시민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들의 정치적 지지를 묶어 세우는 것이야말로 미약한 현 정권의 지지기반을 새롭게 확대 강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유일무이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사 설

정보화 장기 계획 시급

오늘날 세계 각국이 정보사회를 향해 경쟁적으로 줄달음치고 있고 각국의 정보화 추진상황과 계획은 그 나라의 발전가능성을 가리키는 척도가 되고 있다.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기업과 대학을 또한 정보화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혁신의 계기로 삼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 ATM망 공사를 비롯한 설비투자 와 가상대학 추진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가 외부로부터 받아온 대학종합평가, 교육개혁 평가, 학과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얻어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정보화평가에서는 최우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교육부 혹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인정받은 평가주체와는 달리 모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평가가 그 심사기준이나 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학계의 비판이 있고 또, 평가가 전부는 아니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평가와 무관하게 우리학교가 정보화를 내실있게 잘 해나가고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 중요한 것은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학 홈페이지 평가에서 우리 학교가 경쟁학교들과 비교해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학교의 정보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정보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은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작 이때까지 배출될 정보관련 전공자들은 약 10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이 방법에는 취업난이 없다. 더우기 정보산업과 관련된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업종의 확보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선진국의 경우에서 실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변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반성해 볼 때이다. 요즘은 논의되고 있는 우리학교의 구조조정과 학부제 개편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에 대한 비전 제시가 미약하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하다.

정보화는 선진국가 진입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인 민주화와 효율화를 달성하는 유력한 수단이자 과정이다. 정보화는 사회구조의 개혁이며 사회조직의 혁신이다. 전산실이나 정보처리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업무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의사소통 방법을 쉽고 편하고 다양하며 효율적으로 하려는 사고방식의 혁신이다. 이러한 혁신적 사고를 가진 정보사회의 주역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이를 위한 전 구성원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가 시급한 때이다.

세시봉

대학은 사회의 축소판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새정부 출범 이후 한달여간의 과정을 보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각 대학의 총학생회를 보는 마음은 착잡하기까지 하다.

지난 87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 이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으로 지난 10년간 명맥을 이어 오던 단일 학생운동조직이 10년만에 '삼국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해방(NL) 계열, 민중민주(PD) 계열, 비운동권이 주도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한총련의 출범 예정일을 10일 정도 앞둔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는 비운동권이 중심이 된 전국 29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새로운 학생연대기구 결성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를 비롯, 서울지역 PD 계열 20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서울대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한총련 내부 개혁을 추진할 회의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회의(가칭)' 설치에 대한 논의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각 주체들이 앞으로 전개하게 될 운동의 방향성

'오월동주'가 아니길



강남이 취재부장

이야 어찌 되었건 3주체 모두는 학생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동일한 필요성에 의해 결성된 각각의 조직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 대학

총학생회의 주류로 자리잡아 왔던 NL 계열과 PD 계열 사이의 충돌은 보이지 않게 존재해 왔고, 기존의 한총련 재건에 대한 논의조차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비운동권 총학생회 조직까지 합세하게 되었으니 학생운동 조직간 충돌이 예상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까지 하다.

첫 출발을 눈 앞에 둔 이들에 대해 지나친 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말 그대로 '기우'일 수 있다. 그러나 출범한 지 한달 쯤을 맞이하는 새정부의 분열된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우려는 결코 지나친 것일 수만은 없다. 여당도 야당도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외세워 본다면 말이다.

PC 통신원

TV프로, 진정한 노인발언대 돼야

토요일 저녁, 황금시간에 방영되는 sbs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는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보이는 무궁해 장면을 연출한다. 자녀들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스튜디오에 출연해 문제를 푸는 '장수퀴즈' 등의 순서들은 그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어수룩한 행동들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PC통신 하이텔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노인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먼저 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하는 통신원들은 '좋은 세상 만들기'가 재미를 위해 노인들을 동물원 원숭이로 대물고 있다(ID:abc2)며 이는 옛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무시된 프로그램(ID:wofox)이라고 비난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인 동시에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ID:개선의정)며 '좋은 세상 만들기'가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때문지 않은 그네들의 모습이 오히려 따뜻하고 훈훈하다(ID:abc2)는 의견도 상당했고 '아! 할머니들은 저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라며 노인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 기쁘다(ID:SPRTAN)는 의견도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그들이 받는 소외감을 인식하고 노인에게도 발언권을 줘야한다(ID:헤이즐넷)며 이렇게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상업적인 이유로 재미만을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 줄 수 없다. '좋은 세상 만들기'가 좀 더 유익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지 한순간 폭소를 자아내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진솔하면서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 보따리들을 하나씩 풀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정수연 기자)

경희만평

노희령

정치인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는 이유.



“가장 깊게 발흙을 간 농군에게 가장 실(實)한 열매가 돌아가리라!”

“입사시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천재성보다는 성실함과 근면성의 테스트다.”

대기업에 계시는 어떤 간부의 말씀입니다.

깊게 공부하든, 넓게 공부하든 학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함과 근면성임을 새삼 강조한 말이 아닐까요.

전문적인 학식을 쌓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쌓든, 여러분이 선택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 꾸준한 보폭을 유지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나아가십시오. 무엇이든 일가(一家)를 이루었던 이들의 한결같은 비결 역시 성실함과 근면성이었음을 되뇌이면서....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대학별곡 제 2계명

